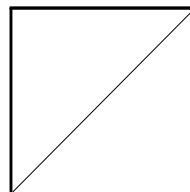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9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8. 26. (제 15 차)	

농협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8. 26.

1. 의결주문

농협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4.29.~2019.5.28. 기간 중 실시한 농협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농협손해보험(주)(이하 ‘회사’)는 2016.1.7.~2018.12.31. 기간 중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은 미지급하였으며, 농기계보험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임에도 미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12백만원 중 130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회사에 과징금 16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 법규 : <붙임 1>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및 舊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舊 보험업법 (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2020.7.2.) 심의필

<별지>

농협손해보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농협손해보험(주)

○ 과징금 16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손해보험(주)(이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130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① 회사는 2016.5.3.~2018.12.4. 기간 중 (무)○○○○○○○○공제 등 5개 보험상품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계약체결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4백만원 중 54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음

② 회사는 2016.1.20.~2018.12.21. 기간 중 (무)△△△△△△△△△△보험 등 36개 보험상품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

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비 등의 정액보험금 1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③ 회사는 2016.1.12.~2018.12.14. 기간 중 (무)◇◇◇◇◇◇◇◇◇◇보험 등 13개 보험상품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 등을 각각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53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④ 회사는 2016.3.4.~2018.6.27. 기간 중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7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을 위반하였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함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제196조(과징금) ① 9.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법률 제14821호(2017.10.19. 시행)에 해당함

□ 舊 보험업법(2017.10.19. 개정 직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8. (생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0호, '15.7.1. 시행)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라.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 마.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과징금의 산정

-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 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	-------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 × 7/10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법정부과한도액 - 200억원) × 7/80
2천억원 초과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1,800억원 × 7/80 + (법정부과한도액 - 2,000억원) × 7/160

6. 기본과징금의 조정 (1차 조정)

가. 원칙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단계 조정)

구분	고의	과실
중대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12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보통의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경미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	------

중대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통의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 - 중대,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2단계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25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 범위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6.30>

☐ 회사 「무배당○○○○○○○○공제 약관」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상해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2조(상해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농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⑤ 공제를 모집한 농협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 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직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2조(상해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⑦ 농협은 다른 공제가입내역(보험가입내역 포함)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 「무배당△△△△△△△△△△보험△△△△ △△△△△△△△△(1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 「무배당◇◇◇◇◇◇◇◇◇◇보험◇◇◇◇ ◇◇◇◇◇◇◇◇◇◇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 「○○○○○○보험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농기계포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손해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0. 8.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16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손해보험(주)(이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130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① 회사는 2016.5.3.~2018.12.4. 기간 중 (무)○○○○○○○○공제 등 5개 보험상품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계약체결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계약 전·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4백만원 중 54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음

② 회사는 2016.1.20.~2018.12.21. 기간 중 (무)△△△△△△△△△△보험 등 36개 보험상품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

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비 등의 정액
보험금 1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③ 회사는 2016.1.12.~2018.12.14. 기간 중 (무)◇◇◇◇◇◇◇◇◇◇보험 등
13개 보험상품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 등을 각각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53백만원을 부당
하게 미지급하였음

④ 회사는 2016.3.4.~2018.6.27. 기간 중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7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제1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72	02-3145-7527